

경합공간(agonistic space)으로서 공론영역과 행정: C. Mouffe의 급진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임 의 영**

< 목	次 >
I. 서론	IV. 헤게모니적 기획들이 충돌하는 경합공간으로서 공론영역
II. 이론적 기획: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	V. 경합적 공론영역의 행정적 의미
III. '정치적인 것'의 의미	VI. 결론

<요 약>

공론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종래의 논의는 주로 심의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공론영역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이상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론영역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있다. 공론영역이 합의보다는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경합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상탈 무페는 심의민주주의와의 대결을 통해서 급진적 민주주의 혹은 경합적 민주주의모형을 제시한다. 이 글은 먼저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경합적 공론영역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무페의 이론적 기획 전모와 적대 혹은 경합으로서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검토한다. 그리고 헤게모니적 기획들이 충돌하는 경합공간으로서 공론영역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경합공간으로서 공론영역을 창출하는 데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

【주제어: 공공성, 공론영역, 급진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정치적인 것, 무페, 행정】

* 본 논문은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정비로 연구하였음(과제번호-120140316).

** 강원대학교 교수(eylim@kangwon.ac.kr)

논문접수일(2015.4.22), 수정일(2015.5.30), 게재확정일(2015.6.17)

I. 서론

행정현상을 이해하는 데 공공영역(public realm)의 개념적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장, 그것을 반영하는 통치구조인 거버넌스, 사회적 의사결정논리인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현대행정학의 중요한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공공영역 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다. 공공영역은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있다. 예컨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범주화한 공공부문(public sector, 안병영·정무권·한상일, 2007), 혹은 시민사회에서 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영역 혹은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Arendt, 1958; Habermas, 2001; Rawls, 2005; 임의영, 2014).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에는 공공부문의 역할이나 기능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공론영역에서 토론을 통한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정치공동체를 보다 정의로운 삶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시장화, 상품화, 상업화가 확대·심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면서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Crouch, 2008, 2012). 공공성은 평등(정의)과 민주주의를 축으로 하는 이념이다(임의영, 2003, 2010). 결과적 차원에서 평등과 절차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공공성은 실현가능하다.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평등에 기초한 정의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의영, 2011). 그리고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해 분배원칙들이 선택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Young, 1990), 공론영역으로서 공공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론영역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계는 하버마스(J. Habermas)와 롤스(J. Rawls)의 공론영역에 기초한 민주주의 개념에 익숙하다. 하버마스(2001)는 소통합리성을 훼손하는 도구적 합리성, 경제적 이익, 권력관계가 배제된 ‘이상적 담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을 공론영역의 모델로 제안한다. 롤스(2005)는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공적 이성을 활용하는 일종의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을 공론영역의 모델로 제안한다. 이들에 앞서 아렌트(H. Arendt, 1958)는 말과 행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는 정치적 공간이자 실존적 공간으로서 공론영역을 제안한 바 있다(임의영 외, 2014). 이들이 공론영역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합의이다. 이러한 공론영역에 대한 논의들은 심의민주주의, 헌정민주주의, 시민공화주의 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공론영역에 대한 논의는 단순화시키면, 합리적인 소통의 절차가 실현된다면 자동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이는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이다.

현실에서 관찰되는 합의는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나 담론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루어진 합의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현실의 공론영역은 겉으로는 합리적 이성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헤게모니를 쟁취하려는 세력들이 경합하는 공간일 가능성이 크다. 공론영역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현실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합이 이루어지는 공론영역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할 것이다. 무페(C. Mouffe)는 공론영역의 이러한 경합적 성격에 주목한다. 공론영역은 다양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신념, 가치관 등을 보편적인 것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주의주장들이 경합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급진민주주의(radical democracy)라 부른다. 무페의 연구는 공론영역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물론 행정과 공공영역의 관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우선 무페의 이론적 기획의 전모를 소개한다. 그리고 그녀가 해명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것에 기초해서 경합적인 공론영역의 특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경합공간으로서 공론영역이 행정에 대해 갖는 의미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기획: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

무페는 벨기에의 가톨릭 루벵대학(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파리 대학(Université de Paris)에서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알튀세(Louis Althusser)에게 철학을 배웠다. 그리고 1970년대 초에는 콜롬비아 국립대학(Universidad Nacional de Columbia)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그녀는 콜롬비아의 정치적 현실과 사회운동을 경험하면서 철학에서 정치학으로 관심을 선회하게 된다. 그리고 무페는 에섹스 대학(the University of Essex) 정치학 석사과정에서 콜롬비아의 산업화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는다(Mouffe & 광준혁, 2009: 130-131). 그 이후 그녀는 민주주의의 급진화(radicalization)를 위한 이론적 기획에 집중한다(Mouffe(ed.), 1992; Smith, 1998; Torfing, 1999: 256).

무페의 이론적 기획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기획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함께 저술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전략: 급진민주주의의 정치를 향하여(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1985)》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좌파 사상은 갈림길에 서있다. 과거의 ‘명확한 진리들’은 그런 진리들이 구성되었던 기반을 허물어뜨리며 쇠도하고 있는 역사적 변환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Laclau & Mouffe, 2012: 27).” 역사적 변환은 계급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생산주의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자극한다(Laclau & Mouffe, 2012: 303-304; Torfing, 1999: 1-2). 첫째, 1968년 이후 유럽에서 여성, 평화, 환경, 성 등을 이슈로 하는 신사회운동이 증폭되면서 사회변혁운동에서 노동계급의 우위성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다양한 사회운동의 주체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론을 구상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둘째, 1970년대의 오일 쇼크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과 사회적 조화를 회복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계획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신자유주의 담론과 실천이 헤게모니를 획득하게 된다.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담론을 구상할 필요성이 커진다. 셋째, 대량생산의 포드주의 체제의 위기와 생태파괴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적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에 따라 경제활동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론을 구상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전략》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이론적 기획을 ‘포스트-마르크스주의(Post-Marxism)’로 규정한다(Laclau & Mouffe, 2012: 32). ‘포스트’는 경직된 마르크스주의에 내재하는 경제결정론이나 계급환원론과 같은 배타적 본질주의(essentialism)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과정에서 개발된 헤게모니 개념을 좌파 담론의 중심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Mouffe(ed.), 1979).¹⁾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전략》에서 개진된 문제의식이나 이론적 기획에 대해 공저자인 라클라우와 무페는 상이한 길을 걷게 된다. 라클라우는 이론적으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전략》의 관점을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집중한다. 반면 무페는 정치철학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자신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접합하면서 급진민주주의 이론을 구성하는 데 집중한다(Townshend, 2004). 무페의 《정치적인 것의 귀환(*The Return of the Political*, 1993)》은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정치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편집한 것으로서 정교하게 체계화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반본질주의(anti-essentialism)라는 하나의 일관된 관점을 견지한다(Mouffe, 2007: 9). “나는 시종일관 전체 차원의 본질주의든 요소 차원의 본질주의든 본질주의 일체를 거부한다(Mouffe, 2007: 20)”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전략》이 마르크스주의에 내재된 본질주의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정치적인 것의 귀환》

1) 포스트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응에 대해서는 Geras(1987)와 Laclau & Mouffe(1987) 참조.

은 정치철학 일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무페는 한편으로 롤스의 정치철학,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등에 내재된 본질주의적 성격들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전유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특성을 칼 슈미트(Carl Schmitt)에 의존해서 적과 동지의 적대관계에서 찾는다. 그런데 본질주의는 사회에 내재하는 다양한 권력관계 혹은 지배와 예속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페는 본질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귀환’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서 성, 인종, 연령, 지역, 종교 등 사회의 다양한 관계들에서 지배세력들과 예속세력들 간의 적대관계들을 드러내고 지배를 해체하는 것이 현대민주주의의 존재조건임을 정당화한다. 급진민주주의는 이러한 적대 혹은 경합의 다원주의(agonistic pluralism)를 민주주의의 당연한 조건으로 삼는다(Mouffe, 2007: 15).

무페는 《민주주의의 역설(The Democratic Paradox, 2000)》에서 정치철학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책제목 그대로 ‘민주주의의 역설’로 제시한다. 근대민주주의의 특성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인 필연성이 없는 두 개의 전통이 접합된 것이다. 하나는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주권 등의 사상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 전통’이다(Mouffe, 2006: 16). 전혀 다른 두 전통이 자유민주주의로 접합된 것은 우연적인 사건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하나가 억압되는 역설이 존재한다. 심의민주주의는 이러한 역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기도 하다. 무페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동의와 화해가 본질적으로 사회에 편재하는 권력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녀는 민주주의의 역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합적 민주주의(agonistic democracy) 모델을 제안한다. 그것은 사회에 편재하는 권력관계를 민주주의의 존재조건으로 삼는다.

‘정치적인 것’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정치적인 것에 대하여(On The Political, 2005)》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무페는 ‘좌와 우를 넘어서는(beyond left and right)’ 정치적 비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그녀는 그것을 ‘탈정치적 비전(post-political vision)’ 혹은 ‘반정치적 비전(anti-political)’으로 규정한다. 당파성을 초월한 정치는 정치적인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Mouffe, 2005: 6). 따라서 무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주주의 이론가나 정치가들의 과제는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상이한 정치적 기획들이 노정될 수 있는 활기찬 경합적 공론영역(agonistic public sphere)의 창출을 구상하는 것이어야 한다(Mouffe, 2005: 3).”

무페의 이론적 기획은 민주주의의 급진화이다. 그것의 조건은 일체의 본질주의나 근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사회에는 다양하면서도 고유한 형태의 지배관계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관계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지배 관계가 사람들에게 저절로 드러나거나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급진화는 이러한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무너뜨릴 수 있는 대항담론을 만들어 경합함으로써 권력관계를 해체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페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경합적 공론영역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Ⅲ. ‘정치적인 것’의 의미

무페가 ‘정치(politics)’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는 탈정치적인 시대정신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문적으로도 정치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연구는 다르게 이루어진다. 정치과학(political science)은 ‘정치’에 대한 경험적, 사실적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그에 반해 정치이론(political theory)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무페는 존재적인 것(the ontic)과 존재론적인 것(the ontological)을 구분한 하이데거(M. Heidegger)에 의 존해서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차이를 설명한다(Mouffe, 2005: 8).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적인 것은 실체의 현상(what)에 대한 접근을, 존재론적인 것은 실체의 존재원리(how)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실체의 현상에 대한 접근은 기술적인 반면, 실체의 존재원리에 대한 접근은 구성적이다. 그러나 존재적인 것과 존재론적인 것의 범주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존재론적인 것이 존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으로 구성된 것이 반복되면 존재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구분에 따르면, 존재적인 것은 정치의 다양한 관행들로서 정치에 해당된다. 존재론적인 것은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으로서 정치적인 것에 해당된다. 정치적인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다. 변화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인 것’의 개념적 의미는 학자마다 다르다. 크게 보면, 합리적인 소통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추구하는 공적 심의과정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아렌트류의 입장과 적대적 관계에서 헤게모니를 쟁취하고자 하는 경합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무페류의 입장이 있다(Wenman, 2003). 무페는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적대적 관계들을 정치적인 것의 존재조건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일련의 관행과 제도로서의 정치는 질서를 창출하고 정치적인 것에 의해 제공되는 갈등의 맥락에서 인간의 공존을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Mouffe, 2005: 9). 그녀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정치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무페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슈미트에 의존한다. 슈미트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별을 본질로 한다. “적과 동지의 구별은 결합 내지 분리, 연합 내지 분열의 가장 강도 높은 경우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지며, …도덕적, 미학적, 경제적 또는 다른 모든 구별을 그것과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Schmitt, 2012: 39).” 정치적인 것은 도덕적 선-악, 미학적 미-추, 경제적 손-익의 구별과는 독립적으로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예컨대 아름답다고 해서 동지가 되고, 추하다고 해서 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행위는 ‘그들’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우리’라는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것을 적대(antagonism)로 이해한다면, 공공영역은 토론을 통한 합의의 공간이 아니라 ‘결정의 공간’이 된다. 공공영역에서 도달한 합의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포용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²⁾

그렇다면 정치적인 것의 본질적인 조건인 적대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라클라우와 무페는 적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칸트의 실재적 대립(real opposition) 및 논리적 모순(logical contradiction) 개념과 비교한다(Laclau & Mouffe, 2012: 222-223). 칸트에 의하면, 실재적인 대립은 두 개의 독립적인 물리적 대상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A-B] 관계유형이다. 사회적 적대는 물리적 대상들 간의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실재적 대립과는 다르다. 논리적 모순은 두 개의 대립되는 명제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A-非A] 관계유형이다. 논리적 모순 관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대와 논리적 모순은 다르다. 적대 개념을 실재적 대립이나 논리적 모순에 동화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클라우와 무페에 따르면, A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다(Laclau & Mouffe, 2012: 227). 실재적 대립과 논리적 모순은 기본적으로 A를 완결된 A로 가정한다. A의 정체성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논리적 모순의 경우, A는 완전하게 A이기 때문에, A를 非A라고 하는 것(A=非A)은 모순적이며 불가능한 것이다. 실재적 대립의 경우, A는 완전하게 A이기 때문에, B와의 관계에서 충돌과 같은 객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적대는 타자가 A가 완전하게 A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가정한다. A의 정체성이 적대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A-反A] 관계유형이다(Torfin,

2) 슈미트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무력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은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가와 정치를 회피하거나 무시한다. 그리고 그 대신 두 개의 이질적인 영역, 즉 윤리와 경제, 정신과 사업, 교양과 재산이라는 전형적이며 항상 반복되는 양극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다. 국가와 정치에 대한 비판적 불신은 어디까지나 개인이야말로 출발점이며 도착점이라는 체계의 원리들로부터 쉽게 설명된다(Schmitt, 2012: 94-95).”

1999: 44-45). 적대는 정체성에 대해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적대는 정체성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동시에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한편으로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적대세력(反A)과 대립하는 사람들과 동지로서의 정체성(A)을 형성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나의 적을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이 개발주의자라면, 나는 환경론자인 것이다. 또한 나의 적의 적은 곧 나의 동지이다. 나의 적의 적이 반개발주의자라면, 나는 반개발주의자인 것이다. 이처럼 적대관계는 나의 정체성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의 적대세력은 나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적은 나를 전복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자(A)는 공장소유자인 적대세력(反A)에 의해 공장에서 해고되면, 더 이상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 나와 적은 변증법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총체성의 계기들이 아니다. 나와 적 사이에는 화해를 지향하는 변증법적 지양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조화나 화해가 계속적으로 지연된다.

무페는 이러한 적대와 정체성의 관계를 데리다(J. Derrida)의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 개념으로 이해한다. 구성적 외부는 ‘모든 정체성이 관계적이라는 것 그리고 차이의 긍정이, 즉 외부를 구성하는 어떤 타자에 대한 인식이 모든 정체성의 존재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Mouffe, 2005: 15)’을 의미한다.³⁾ 정체성의 형성은 차이를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는 종종 배제 혹은 형상과 질료, 본질과 우연,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등, 두 극 사이의 계층적 구조를 토대로 정립되기도 한다. 이는 차이로 구성되지 않는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객관성은 권력행위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Mouffe, 2007: 223-224). 따라서 사회에는 다양한 적대들이 존재할 수 있다.

무페는 슈미트의 적과 동지의 구별로서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수용하지만, 적대 개념을 재구성한다. 적대는 우리와 그들이 공통의 끈이 없이 서로에 대해 극복해야 할 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슈미트는 이러한 적대 개념에 충실하다. 무페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치의 중요한 과제는 사회적 관계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적대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리와 그들 간의 관계를 초월함으로써 적대를 완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결사체를 파괴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는 갈등의 당사자들을 묶어주는 공통의 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된다면, 적대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대의 요구를 부당하게 여기면서 상대를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무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적대(antagonism)와 대비하여 경합(agonism)을 제안한다. “경합은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비록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의 정당성을 인정

3) 데리다의 해체와 로티(R. Rorty)의 실용주의가 민주주의와 갖는 관계에 대해서는 Mouffe(1996) 참조.

하는 우리와 그들의 관계이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경합자(adversary)이다. 이것은 그들이 갈등하면서도 자신들을 동일한 정치공동체에 속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공통의 상징공간(common symbolic space)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과제는 적대를 경합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Mouffe, 2005: 20).” 따라서 무페는 자신의 민주주의모형을 경합적 민주주의라 부른다.

IV. 헤게모니적 기획들이 충돌하는 경합공간으로서 공론영역

1. 정치철학 비판

무페의 이론적 기획은 기본적으로 본질주의 일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비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철학을 새로이 정초하는 것이다. 그녀는 사회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등에 내재된 본질주의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 내재된 급진적 요소를 추출하여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무페가 새로이 정초하고자 하는 정치철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철학에 대한 그녀의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페는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성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녀는 근대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계기를 클로드 르포(Claud Lefort)가 말하는 ‘확실성 지표의 해소(the dissolution of the markers of certainty)’에서 찾는다. 르포에 따르면, 근대민주주의사회에서는 권력, 법, 지식이 근본적으로 ‘비결정적’이다. 이는 민주주의 혁명의 결과이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군주와 같은 인격에 체현된 권력이나 초월적인 권위와 관련된 권력을 소멸시켜버렸다. 그 결과 ‘텅 빈 장소(an empty place)’로서 권력을 전제로 하는 사회의 제도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Mouffe, 2000: 1-2, 2007: 26).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성은 본질주의에 반하는 불확실성과 비결정성을 핵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무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에 의존해서 기존의 정치철학에 내재하는 본질주의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⁴⁾

첫째, 무페는 사회주의에 내재하는 경제주의(economism)에서 본질주의의 유령을 발견한다. 경제주의는 부수현상론(epiphenomenalism)과 환원론(reductionism)으로 구성된다. 부수현상론은

4) 무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녀를 포스트모더니스트라 할 수는 없다. 그녀는 자신의 이론이 탈근대적이며 동시에 근대적이라 생각한다(Mouffe, 2007: 1장).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형태와 기능이 경제적 토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부수현상에 불과하며, 역사발전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 이러한 부수현상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한계를 극복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가령 알튀세(Althusser, 1979)와 풀란차스(Poulantzas, 1986)와 같은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 영역 및 이데올로기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강조하면서도, 최종심급에서 경제가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환원론은 상부구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물질 생산영역에서의 구조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모순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법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계급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원론은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본질적 요소인 계급모순으로 귀인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부수현상론과 계급환원론에 내재된 본질주의는 역사발전의 필연성,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의 우위성, 공산주의 이행기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리고 공산당의 무오류성 등으로 표출되어, 현실사회주의를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페의 의도는 본질주의를 이유로 사회주의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본질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의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평등의 이념에 보다 충실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둘째, 무페는 자유주의에 내재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에서 본질주의적 특성을 찾는다. 개인은 모든 자유주의 원리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칸트(Kant)는 인간을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법칙을 제시한 바 있다. 목적적 존재로 인간을 대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자율성은 스스로 원칙을 만들고 스스로 복종하는 자기결정과 자기복종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개인의 자율성은 다른 자율성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이유로도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주의는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로 본다. 정치공동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는 공(公)과 사(私)를 분리해서 사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특성들이 자유주의에 어떠한 한계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정치적인 것을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는 적대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선호를 합산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또한 자유주의는 주체로서 개인을 한편으로는 ‘무연고적 자아’로, 다른 한편으로는 완결된 혹은 일관된 존재로 인식한다. 무연고적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공동체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자아관을 말한다(Sandel, 1982). 완결된 혹은 일관된 존재로서의 주체관은 복수로 존재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단일한 것으로 보는 자아관이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구분에 근거한 사유방식이 갖는 문제는

롤스(Rawls, 2005)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롤스는 다원주의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다. 다원주의는 개인들이 나름대로의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다원주의를 정치적 결정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결정을 위해 극복 내지는 회피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그가 취한 방법은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개인의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원칙들을 사적인 것으로 배제하고, 오로지 공적 이성에 의존해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롤스가 추구하는 공적 이성에 의한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는 공과 사의 엄밀한 구분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방식은 다원주의를 배제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롤스의 정치철학은 ‘정치 없는 정치철학’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Mouffe, 2007: 3장). 무페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그것이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은 새로운 민주주의이론을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한다.

셋째, 무페는 공동체주의에 내재하는 공동선(common good)에서 본질주의적 특성을 찾는다. 자유주의자들이 사회공동체에 앞서서 주체가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공동체주의는 사회공동체에 의해 주체가 형성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무연고적 자아를 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공동체주의자는 ‘단일한 상황적 자아’를 전제한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공동선은 주체의 형성과 윤리적 행동의 원칙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선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들의 합도 아니고 가치관의 종합도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 자체의 생존과 유지 혹은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말한다. 공동체주의자들 가운데 매킨타이어(MacIntyre, 1984)와 샌들(Sandel, 1982)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공동선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를 거부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페는 단일한 상황적 자아관은 무연고적 자아관과 대별되지만, 두 경우 모두 단일한 주체관념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 또한 공동선에 천착하여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공동체주의는 본질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무페는 공동체주의자들 가운데 개인의 권리와 다원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을 접목하고자 하는 테일러(Taylor, 1989)와 왈저(Walzer, 1983)의 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2. 정치철학적 기초의 재구성

무페는 본질주의적 속성이 여과된 사회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정치철학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주체관, 정치결사체, 사회변혁전략, 그리고 다원주의의 재구성이다.

첫째, 주체관에 대해 살펴보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한편으로는 무연고적 자아와 상황적 자아라는 상반된 주체관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단일한 정체성을 갖는 주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에 있다. 무페는 바로 ‘단일한 주체관’을 ‘복합적 주체관’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녀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 속에서 새겨진 주체 위치들의 한 집합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자리로서 개인, 다시 말해 수많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다원적인 집단적 정체성 형성의 형식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개인(Mouffe, 2007: 156)’에 관한 이론의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생산관계에서의 구조적 위치(자본가와 노동자), 성적 위치(남성과 여성, 이성과 동성), 인종적 위치(백인과 유색인) 등 다양한 위치에 있다. 생산, 성, 인종 등 각각의 영역에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담론이 존재한다. 생산담론, 성담론, 인종담론 등을 매개로 각각의 영역에서 개인의 위치짓기(positioning)가 이루어진다. 위치짓기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렌즈를 통해 응시하는 타자의 시선이나 타자의 호명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개인은 다양한 담론을 매개로 형성된 다양한 정체성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 개인은 ‘(부자가 아닌)가난한’ ‘(흑인이 아닌)백인’ ‘(남성이 아닌)여성’ ‘(자본가가 아닌)노동자’로 존재한다.

둘째, 정치적 결사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무페는 공동체주의와 관련해서 실체적 공동선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성’, 즉 윤리-정치적 유대의 관념을 함축하는 정치결사체의 양식을 모색한다. 그녀는 인간결사체를 유니베르시타스와 소키에타스로 분류한 오크쇼트(M. Oakeshott)의 논의에 의존해서 대안적인 정치결사체양식을 제안한다. 유니베르시타스는 공동의 실체적 목적, 일종의 공동선의 관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결사체이며, 거기에서 공동체와 구성원들은 일체가 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격체들은 거의 동일한 인격체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차이나 다양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 소키에타스는 참여자들이 행위의 일정 조건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서로 관계하는 시민결사체이다. 여기에서 인격체들을 이어주는 것은 공동 관심사 혹은 공적 관심사를 명시하는 조건들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다. 따라서 인격체들은 소키에타스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무페는 소키에타스가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결사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공동체는 공동선이라는 실체적 관념이 아니라 공동의 유대, 공동의 관심사에 의해 결합된다. 따라서 그것은 규정된 형태나 유대 없이 끊임없이 새로이 제정되는 공동체이다(Mouffe, 2007: 111).” 이것은 이익추구를 위해 도구적으로 결사체에 참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이익이 아니라 정체성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변혁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사회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사회에는 두 개의 계급만이 존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계급이 전면적인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계급주의와 노동자계급의 우위성에 대한 신념

을 읽을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변혁의 전략은 갈등의 전선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무페는 그람시(A. Gramsci)에 의존해서 사회에는 다양한 전선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전선은 지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예컨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배경으로 하는 여성억압, 이성애중심적인 사회구조를 배경으로 하는 동성애자 억압, 백인중심의 사회구조를 배경으로 하는 유색인 억압 등과 같이 다양한 전선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무페는 전면전이 아닌 진지전(position war)과 연대(solidarity)를 변혁운동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한다. 진지전은 각각의 영역에서 사회관계에 내재된 지배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미시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다.⁵⁾ 물론 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미시적 전투는 다른 진지의 지원사격을 통해 보다 강해질 수 있다. 지원사격은 바로 연대를 의미한다. 연대는 각각의 주체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목적—지배의 극복—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체들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사회변혁운동은 중국적인 상태를 지향하기보다는 영구적인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변혁운동은 어떤 사회에 도달하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지배가 존재하면 작동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넷째, 다원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자유주의는 이해관계의 다양성 혹은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입장의 다양성을 발견하였지만, 그것을 사적인 영역으로 추방한다. 공적 영역을 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공간으로 보거나, 오직 공적 이성과 소통적 합리성에 따라 공적인 일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본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선과 구성원의 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원주의를 억압한다. 사회주의는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함으로써 다원주의를 파괴한다. 무페는 다원주의를 공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반정치적 장애물이 아니라 정치를 활성화하는 정치적 자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다원주의를 정치적인 것의 귀환을 위한 조건으로 본다. 무페가 생각하는 다원주의는 지배관계가 작동하는 사회영역의 다원성이다. 그래서 그녀는 정의영역의 다원성을 강조한 왈저의 통찰에 공감한다(Mouffe, 2007: 61-64). 왈저에 따르면(Walzer, 1983), 분배의 대상인 가치들은 사회를 초월하여 본래부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서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가치의 배분은 공동체가 부여한 의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가치의 분배에 다른 영역의 가치가 영향을 미친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적 선거를 통해 분배되어야 할 정치적 권력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5) 무페는 그람시의 진지전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람시의 진지전은 기본적으로 계급적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무페의 눈에는 여전히 본질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녀는 계급주의적 관념이 배제된 것으로서 진지전을 생각한다. 무페는 그람시의 진지전이 추구하는 것을 인민투쟁이라 부르고, 자신이 진지전을 통해 추구하는 것을 민주주의 투쟁이라 구별하여 부른다(Laclau & Mouffe, 2012: 245-247).

영역들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다시 말해서 분배의 다원성이 보장될 때, 정의가 실현가능하다고 본다.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은 자유주의의 다원주의에 대한 관념과 가치의 공동체적 특성을 접목한 독자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무페는 왈저와 다루는 대상은 다르지만, ‘영역의 다원성’이라는 관점을 공유한다. 사회에는 가부장제적인 성차별, 식민주주의적인 인종차별, 자본주의적인 계급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지배관계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지배관계는 다른 지배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유형의 지배관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특정한 유형의 지배관계를 다른 유형의 지배관계를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계급차별을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는 환원론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배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적과 동지의 구별을 본질로 하는 정치적인 것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장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원주의는 정치적인 것의 존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3.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 심의민주주의와의 대결

급진민주주의의 핵심전략은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이다. 이는 심의민주주의의 핵심인 합의추구적 공론영역 창출과 대비된다. 무페에 따르면,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공유한다(Mouffe, 2000: 84-87). 하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설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로크적 전통의 개인적 권리와 루소적 전통의 정치적 권리 혹은 인민주권의 동시적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권위와 정당성을 공적 사유과정 위에 정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며, 도구적 합리성이 아니라 규범적인 차원의 합리성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롤스의 경우는 ‘합당성’을, 하버마스의 경우는 ‘소통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심의민주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의 장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불편부당성의 원칙에 따라 논변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다. 예컨대 롤스의 경우는 ‘원초적 상황’을, 하버마스의 경우는 ‘이상적인 담화상황’을 적절한 정치적 장의 모델로 제안한다. 이러한 정치적 장을 창출함으로써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합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편부당하고 평등한 사람들이 자유로운 공적 사유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들에 의해 도달한 합의를 잠정적인 것(modus vivendi)으로 볼 수 없다. 합의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무페는 심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Mouffe, 2000: 90-93). 첫째, 배제 없는 합의—모든 사람들의 동의—의 문제이다. 심의민주주의자들은 배제 없는 합의를 위한 조건들을 구상하는 데 천착하지만, 그들이 제안한 조건들 자체가 배제적인 성격

을 갖는다. 가령 롤스의 경우는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공적인 사유과정에서 개인이 갖는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원칙을 회피함으로써 배제 없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하버마스의 경우는 실체와 절차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순수하게 소통적 합리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함으로써 배제 없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무페는 현실적으로 공공영역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절차의 설계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심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배제 없는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합의는 잠정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적 자율성과 정치적 자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심의민주주의자들은 두 개의 자율성이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이라 본다. 다시 말해서 심의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설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롤스의 경우는 공적 자율성을 사적 자율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인민주권을 자유주의적 권리에 종속시킨다. 하버마스의 경우는 개인적 권리의 중요성은 그것이 민주적 자치를 가능케 하는 데 놓여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측면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설을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무페의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실로서의 다원주의를 이론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무페에 의하면, 심의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합의는 실질적으로 잠정적이고 불안정하다. 합의는 적과 동지의 구분, 즉 적대 위에서 작동하는 정치적인 것의 속성으로 인해 배제를 수반하게 된다. 배제된 입장들은 언제든지 기존의 합의를 문제시하고 무너뜨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의는 배제를 통해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적 외부를 구성한다. 그렇게 형성된 구성적 외부는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합의를 위협한다. 따라서 합의는 가능한 동시에 불가능하다. 무페는 담론과 헤게모니 개념에 의존해서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합의의 역동성을 드러냄으로써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무페가 담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구조주의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구조주의의 핵심은 구조적 결정성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적 현상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본질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구조주의는 구조를 형성하는 하나의 중심—가령 경제적 토대 같은—이 존재하며, 구조는 폐쇄적인 완결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다. 구조의 폐쇄성 때문에 어떤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의 변화는 우연이나 위험 혹은 재앙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구조의 중심성 때문에 구조의 형태적인 변화는 중심의 내적 논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구조주의를 지탱하는 중심성과 폐쇄성은 자기모순적이다. 중심이 구조를 구조화하는데 결정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중심 자체는 구조화과정의 밖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고정된 중심과 폐쇄적인 경계를 갖는 구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며, 따라서 완결된 구조를 지향하는 의미화가 무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페는 담론에 주목한다. “담론은 고정된 중심이나 완전히 폐쇄된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의미가 지속적으로 다시 결정되는 연속적인 의미화의 차별적 총화이다(Torfin, 1999: 85-86).” ‘차별적 총화’라는 말은 담론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담론은 사람들에게 의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다른 담론은 배척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헤게모니이다. 그람시가 지배의 원리로서 제시한 헤게모니 개념은 ‘지적-도덕적 지도력(intellectual-moral leadership)’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내면화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에 의존하는 지배와 다르다. 또한 그것은 피지배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세력들 간의 역학관계에서 획득되는 불안정하고 잠정적인 정치적 지도력과도 다르다. 헤게모니는 어떤 관점이나 인식방법을 정상화함으로써 현상태의 권력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지배의 원리이다. 그것은 담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헤게모니 담론은 구조적 필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존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contingent)으로 결정된다(Mouffe, 2005: 17). 상황의존적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것의 작동양상에 따라 특정담론이 헤게모니를 쟁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헤게모니 담론은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계층화된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정당화하는 진술들로 구성된다. 가령 오늘날의 헤게모니담론인 신자유주의담론은 시장의 논리가 사회 전부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층화된 계급적 지배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Harvey, 2007). 신자유주의담론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교육기관이나 대중매체 같은 것—를 통해 유포되고 일반화된다. 헤게모니 담론은 기존의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대항헤게모니담론(counter-hegemony discourse)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 “모든 질서는 정치적이며 배제의 형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억압되었으나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담론들—저자]이 존재한다. 어떤 질서가 세워지고 사회제도의 의미들이 고정되는 접합적 실천은 헤게모니적 실천이다. 모든 헤게모니적 질서는 대항헤게모니적 실천들—다른 형태의 헤게모니를 세우기 위해 기존의 질서를 탈구하려는 실천들—에 의해 도전받을 가능성이 있다(Mouffe, 2005: 18).”

그렇다면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헤게모니담론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배제와 지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령 노동자,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외국인, 다른 인종, 원손잡이, 비만인 등등을 배제하는 헤게모니담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헤게모니담론들은 가정, 학교, 회사, 시민단체, 종교조직, 공장, 사회운동조직, 정부조직 등 수많은 삶의 공간에서 관철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은 헤게모니담론들과 대항헤게모니담론들이 공론영역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토론과 실천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페미니즘 담론을 공론영역에 노정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담론에 내재된 배제와 지배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그 담론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관행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 헤게모니담론들에 대한 도전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평등’이다. 위계적 사회관계들을 평등한 사회관계들로 대체하여 개인의 자율적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헤게모니담론과 대항헤게모니담론이 경합하는 공간은 보다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배가 작동하는 공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페는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을 민주주의 급진화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근대민주주의의 역설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역설의 근간이 되는 자유와 평등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평등은 자유의 도덕적 기초이다.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 자유는 형식에 불과하다. 평등은 위계적 권력관계 혹은 지배관계가 배제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자유는 지배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페는 마키아벨리의 해석에 의존해서 이에 대한 답을 찾는다(Mouffe, 2007: 66-69). 개인의 자유는 개인이 시민적 덕을 수행할 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적 덕이란 정치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참여이다. 개인의 자유는 평등한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페는 경합적 공론영역이 바로 이러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때, 근대민주주의의 역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V. 경합적 공론영역의 행정적 의미

지금까지 무페의 경합적 공론영역을 핵심으로 하는 급진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을 위해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행정의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1. 대외적 측면에서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을 위한 행정의 역할

담론투쟁의 공간으로서 공론영역의 창출은 적대가 아닌 경합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조건은 정당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

당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담론들에 도전하는 세력들의 의견, 입장,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역량과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 헤게모니담론들을 중심으로 경합적인 공론영역들의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최장집·박찬표·박상훈, 2007). 정당은 다수의 지지를 통해 정치권력을 쟁취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를 위한 담론투쟁에 개입하는 것이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일관성 있는 담론투쟁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행정은 다수의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합적 공론영역의 특성을 국가와 행정의 존재방식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를 실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를 인식하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국가를 이해한다. 또한 베버주의자들은 주도적으로 행위하는 주체로서 국가를 인식하기도 한다. 이들은 입장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국가를 실체로 인식한다(Jessop, 2008: 3). 그러나 경합적 공론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그것도 유동적인 관계이다(2008: 6). 국가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과 제도들을 포괄하는 국가기구(정부나 행정)와 그 외의 다양한 조직들과 제도들의 관계 자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구와 비국가기구들 간의 경계와 관계방식은 경합적 공론영역에서 결정된 헤게모니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보편적 복지담론이 헤게모니를 쟁취하게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보편적 복지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선별적 복지가 지속가능한 복지의 방향이라 보고 있다. 이처럼 공론영역에서 선택된 헤게모니담론이 대항헤게모니담론과 지속적으로 경합하기 때문에 국가기구와 비국가기구들의 경계나 관계방식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케인즈주의적인 복지담론이 지배하는 경우와 신자유주의 담론이 지배하는 경우 국가기구와 비국가기구들 사이의 경계선과 관계방식이 같을 수는 없다.

경합적 공론영역의 관점에서 국가는 사회적 관계로서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담론들이 경쟁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국가는 헤게모니담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을 갖는다. 이는 국가가 다양한 담론들 가운데 특정한 담론에 대해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는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한 담론들이 개발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공간이다. 국가는 다양한 세력들이 충돌하고 경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자(정치가와 고급관료)은 사회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 활동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교한 정치적 담론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셋째, 국가는 과거의 헤

게모니 담론투쟁의 산물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의 전략적 선택성은 부분적으로 국가의 과거의 전략적 선택성의 유형들과 국가의 변형을 위해 채택된 담론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Jessop, 1990: 260-262).

국가를 사회적 관계로 인식하게 되면, 국가기구로서 행정은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승인받은 국가기구의 기능은 ‘공동이익이나 일반의지의 이름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집합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고 강제하는 것(1990: 341)’이다. 행정이 명분으로 내거는 공동이익이나 일반의지는 경합적 공론영역에서 선택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말 그대로 ‘공동의’ 이익이나 ‘일반적인’ 의지라 말할 수는 없다. 경합적 공론영역에서의 결정은 합의가 아니라 결정으로서 배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이 처해있는 일종의 역설적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행정은 국가라는 사회적 관계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국가 전체의 이익과 의지를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행정의 존재론적 위상(부분)과 기능론적 위상(전체)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담론들과 전략적으로 관계함으로써 헤게모니담론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공동이익과 일반의지를 명분으로 하는 행정의 결정이 배제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헤게모니담론에 대항하는 담론들이 경합할 수 있는 공론영역을 창출하는 것이다. 행정은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행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고 장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분단체제에서 이념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친북이나 중북으로 몰아가는 방식의 대응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 만듦으로써 앞에서 열거한 자유의 실질적인 보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유종성, 2014).

둘째, 행정은 헤게모니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일종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가동함으로써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Jessop, 1990: 211). 따라서 행정은 명확한 공익에 대한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나친 단순화 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익을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다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본다.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다수의 규모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소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행정이 소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면, 대항헤게모니담론들이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갖는 유용성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건물에 계단 이외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슬로프를 설치하게 되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다수의 규모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행정이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헤게모니담론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헤게모니담론의 혜택을 받는 국민들과 그것에서 배제된 국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국민에게는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어떤 국민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행정활동에 대한 피드백장치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다. 행정의 정책집행에 대해 국민들이 반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이 이와 같은 피드백의 제도화, 특히 비판의 제도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 대항헤게모니담론들이 헤게모니담론들과 경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행정은 경합적 공론영역을 행정에 내면화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시민사회, 시장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평적 문제해결기구라 하겠다. 거버넌스는 한편으로는 국가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국가기구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행정이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이면서 동시에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정치적 역학이나 이해관계를 전제로 보면, 거버넌스가 헤게모니 동맹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대항헤게모니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보수적인 NGO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항헤게모니가 행정에 투입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보다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여 공익의 관념, 즉 사회적 소수의 관점이 투입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관점에서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실행된다면 대항헤게모니가 행정에 내면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합적 공론영역이 창출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2. 대내적인 측면에서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을 위한 행정의 역할

행정조직 안에서 경합적 공론영역을 창출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계층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공간에서 공론영역을 창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공무원 충원과정에서 차별을 철폐하거나, 적극적으로 대표관료제의 정신에 따라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을 충원함으로써 경합적 공론영역의 창출을 위한

존재론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치적인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관료제 역시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신념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헤게모니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론적 특성 때문에 특정한 담론을 추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론에 대한 관념적 동일화에 의해 특정 담론을 추종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인구학적 배경에 의해 충원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항헤게모니담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담론을 대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역으로 사회의 주류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들 가운데 대항헤게모니담론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학적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헤게모니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민이나 대항헤게모니담론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공무원들이 담론의 경합에 민감하게 되면,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담론의 경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전제로 한다.

첫째, 행정은 계층적으로 경합적 공론영역이 형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정부조직을 단일의 획일적인 계층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관료제이론의 렌즈로 정부조직을 보는데서 발생하는 착시현상이라 하겠다. 정부조직은 일의 종류에 따라 업무가 분화되어 있으며, 부처들은 상당히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조직은 부처들 간의 관계로 존재한다. 행정을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처가 접촉하는 지점에서 공론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부처의 속성상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건설 관련 부처와 환경 관련 부처, 복지 관련 부처와 재정 관련 부처들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상이한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것이 결정을 지연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나, 정부 안에서 수많은 담론들이 노출되고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이다. 정부 내 부처들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장려된다면, 경합적 공론영역이 행정에 내면화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성, 인종, 종교, 학벌, 지역 등등에 대한 헤게모니담론을 지지하기도 하고, 대항헤게모니담론을 지지하기도 한다. 조직의 계층성으로 말미암아 상위계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담론들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헤게모니담론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안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정당한 것으로 관행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 차별에 민감한 공무원교육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교육과정에 조직 내 차별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단지 차별의 철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합적 공론영역은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차별적 관행에 민감해 진다면, 조직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 시민행정에서도 차별에 민감해질 것이다. (ii) 다양한 담론들, 특히 대항담론들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내부비판의 통로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이버자유게시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헤게모니담론과 대항헤게모니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폐가 말한 것처럼 차별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해소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소위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집단지성은 헤게모니담론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지혜로운 비판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i) 마치 각종 개발정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각종 정책이나 예산편성이 차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헤게모니담론에 내재된 차별과 대항헤게모니담론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VI. 결 론

행정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공론영역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공론영역에 대해 유토피아적인 희망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은 공론영역의 존재이유에 대한 실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을 통한 합의가 실질적으로는 일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둔갑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론영역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관념을 갖는 것이 공론영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공론영역을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관점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폐의 공론영역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폐의 경합적 공론영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공론영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나 롤스의 이성의 공적 이용 등은 행정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심의민주주의의 논거를 제공한다. 무폐 역시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담론투쟁에 주목하여 사회에 편재하는 다양한 차별들을 제거하고자 함으로써 급진민주주의를 제안한다. 급진민주주의 역시 행정이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용할만하다. 이들의 논의는 대

체로 이성애 의존한다. 그러나 토론이건 담론투쟁이건 감정이나 공감애 배제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이 토론이나 담론투쟁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감애 기초하는 공론영역의 가능성이나 의미를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에 관한 이론 활동 자체가 담론투쟁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199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담론을 행정이론분야에서 정교하게 다듬고 정당화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학은 이러한 담론이 공익적 관점에서 다수의 규모를 더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쟁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에 편재하는 다양한 헤게모니담론들이 행정이론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이론적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이론이 행정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헤게모니담론에 대한 행정이론의 민감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안병영·정무권·한상일. (2007). 「한국의 공공부문: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춘천시: 한림대학교 출판부.
- 유종성. (2014).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동향과전망」, 90: 9-44.
- 임의영. (2003).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의 조건. 「정부학연구」9(1): 23-50.
- 임의영. (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44(2): 1-21.
- 임의영. (2011). 「형평과 정의: 조화로운 사회적 삶의 원리를 찾아서」. 파주시: 한울.
- 임의영·고혁근·박진효. (2014).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공공영역과 행정. 「정부학연구」20(3): 71-100.
- 최장집·박찬표·박상훈.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서울: 후마니타스.
- Althusser, L. (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n Althusser(ed.).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127-186. trans. by B. Brewster.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 Althusser, L. & Balibar, E. (1979). *Reading Capital*. trans. by Ben Brewster. London: Verso.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uch, C. (2008).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이한 역. 서울: 미지북스.
- Crouch, C. (2012).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유강은 역. 서울: 책읽는수요일.
- Geras, N. (1987). Post-Marxism? *New Left Review* 163: 40-82.
- Habermas, J.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서울: 나남.

- Harvey, D. (2007). Neoliberalism as Creative Destruc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0(1): 21-44.
- Jessop, B. (1990).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Cambridge: Polity Press.
- Jessop, B. (2008). *State Power: A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Cambridge: Polity Press.
- Laclau, E. and Mouffe, C.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Verso.
- Laclau, E. and Mouffe, C. (1987). Post-Marxism Without Apologies. *New Left Review* 166: 79-106.
- MacIntyre, A.C. (1984).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rtin, J. ed. (2013). *Chantal Mouffe: Hegemony, Radical Democracy, and the Political*, London: Routledge.
- Mouffe, C. & 박준혁. (2009).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상탈 무페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연구」 52(3): 129-186.
- Mouffe, C.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and New York: Verso.[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서울: 후마니타스. 2007.]
- Mouffe, C. (2000).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and New York: Verso.
- Mouffe, C. (2005). *On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 Mouffe, C. ed. (1979). *Gramsci and Marxist Theory*. London/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 Mouffe, C. ed. (1992).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Pluralism, Citizenship, Community*. London and New York: Verso.
- Mouffe, C. ed. (1996). *Deconstruction and Pragmatism*. New York: Routledge, 1996.
- Poulantzas, Nicos. 1986. 「정치권력과 사회계급」. 홍순권, 조형제 역. 서울: 풀빛.
- Rawls, J. (2005). *Political liberalism*(expanded ed.).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ndel, M.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tt, C. (2012).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전·정태호 역. 파주시: 살림.
- Smith, A.M. (1998). *Laclau and Mouffe: The Radical Democratic Imaginary*. London: Routledge.
- Taylor, C.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Torring, J. (1999). *New Theories of Discourse: Laclau, Mouffe, Žižek*. Oxford: Blackwell.
- Townshend, J. (2004). Laclau and Mouffe's Hegemonic Project: The Story So Far. *Political Studies* 52: 269-288.
-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c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 Wenman, M. (2003). 'Agonistic Pluralism' and Three Archetypal Forms of Politics.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2: 165-86.
-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as an Agonistic Space: A Focus on C. Mouffe's Radical Democracy

Euy-Young Lim

Discourses for realizing publicness through activating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generally focus on deliberative democracy. Its advocates develop the ideal that social consensus can be accomplished in the sphere of public discussion. There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f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which regards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not as a consensus space but as an agonistic space for winning hegemony. C. Mouffe develops the radical democracy model or agonistic democracy model through dispute with advocates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article, firstly, examines Mouffe's theoretical project and the meaning of the political as an antagonistic or agonistic. Second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as an agonistic space where hegemonic projects collide with each other.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generating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as an agonistic space.

【Keywords: publicness, public sphere, radical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the political, Mouffe, public administration】